

최근의 물가급등,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하 성 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물가상승의 최근 추이와 전망

최근 유가 등 국제원자재와 농수산물에 가격상승을 주도하면서 물가수준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소비자물가는 2000년대에 와서 비교적 장기간 평균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0년 9월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후반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1분기에 와서 그 상승률은 4%후반으로 다시 뛰었다.

〈표 1〉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년도. 월	2006	2007	2008	2009	2010. 01	2010. 03
소비자물가지수	2.2	2.5	4.7	2.8	3.1	2.3
년도. 월	2010. 06	2010. 09	2010. 12	2011. 01	2011. 02	2011. 03
소비자물가지수	2.6	3.6	3.5	4.1	4.5	4.7

자료: 한국은행.

최근 물가급등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두바이유)는 1년 전에 비하여 38%이상이 올랐고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은 2010년 10월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작황부진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수산물가격도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옥수수, 원당 등 국제곡물과 국내산 콩 등의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역시 확산되고 있다.

〈표 2〉 국제유가상승의 최근 추이

	11. 1/11	11. 2/11	11. 3/11	11. 4/1	1년전 대비
■ 국제유가(두바이유, \$/B)	91.8	97.9	108.3	111.1	38.6% ↑
■ 휘발유(원/ℓ)	1,823	1,848	1934	1970	15.5% ↑
■ LPG(원/ℓ)	1,068	1,069	1,069	1,069	11.6% ↑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전세 값은 집값 안정추세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결국 소비자물가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기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 가격도 2010년 하반기부터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곡물 가격상승은 앞으로 가공식품·공산품 등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제유가와 국제곡물 가격 강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산유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변사태, 세계경기 회복, 글로벌 유동성 확대진행 등으로 국제유가는 앞으로 더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표 3〉 국제곡물 가격의 추이

	11	12	11.1.11	2.11	3.11	4.1	1년전대비
■ 옥수수(센트/부셀)	592	615	607	707	659	736	113.6% ↑
■ 밀(센트/부셀)	775	797	760	867	695	760	6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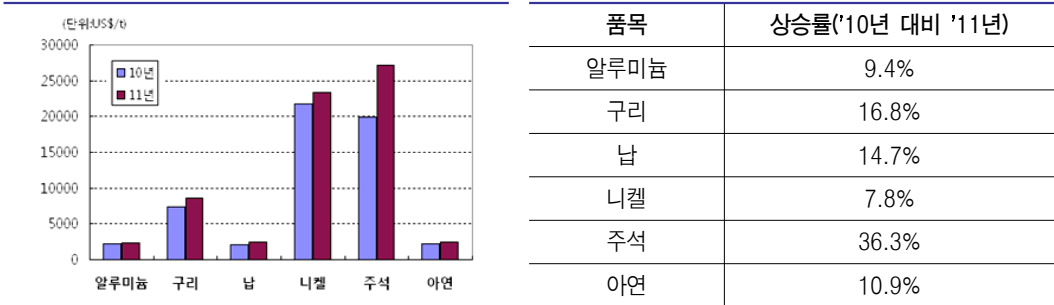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원유나 곡물 외 기타 주요 국제 원자재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신흥국에서의 높은 성장세 및 내수시장 확대 등에 따라 세계 원자재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구리·주석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공급부족이 우려되며, 달러 약세 등 외적 요인이 가세하여 이 원자재들의 가격은 품목별로 10~30%의 범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비철금속 기준).

그리고 2010년의 작황부진에 따른 국내 농산물 공급물량의 감소로 2011년 2/4분기까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은 유가상승 등으로 심한 원가상승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10년 이후의 경기회복국면과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요금의 인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의 지출증가, 풍부한 국내 유동성, 재정지출의 확대, 그리고 수출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국민경제의 총수요도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표 4〉 2011년 비철금속 가격 전망(연평균가격기준)



자료: Barclays, JP Morgan 등 6개 투자은행 전망치 종합(조달청자료 재인용).

2. 당면 물가 문제의 의의와 중요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년에 와서 한국경제는 주요 부문간(예컨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양극화 심화라는 풀기 어려운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물가 급등은 국민 경제에 큰 부담과 불안을 야기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경제의 저 성장 부문(내수 중소기업, 영세상인, 서민 등)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의 고물가) 현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의 느슨한 통화관리 등으로 장기간의 과잉 유동성 상태가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통화팽창정책이 집행되었고, 보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투자확대에 따라 해외의 과잉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크게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경과와 전개는 국내통화의 과다공급을 조장해 왔고 나아가서 이는 시장에서 앞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 즉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키워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차이나 인플레이션 등 주요 신흥국에서의 강한 물가상승세도 이러한 기대심리 확산에 가세하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추정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2010년 12월에는 3.3%에서 2011년 3월에는 3.9%로 상향조정 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급등이라는 불씨는 그냥 불씨가 아니고 주변에 가연물질이 많이 있는 상태-즉, 높은 물가상승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갖게 된 상당히 위험한 불씨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향후 실제 물가상승폭의 추가적인 확대와 함께 이러한 심리의 악화는 금융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의 이동을 가속화시켜 새로운 자산거품을 야기하는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어느 때보다도 물가 상승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물가안정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당국은 올 상반기중에는 물가안정을 성장률 등 다른 여타 정책목표들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3. 최근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지난(2011년) 1월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국제원자재가격 등 상승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인하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물가불안의 주 원인인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및 담당부처별 대응책을 마련 하고 있다.

한편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방물가와 학교 등록금의 안정화를 적극 지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하였고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현장밀착형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해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급 및 가격동향과 불안요인을 매주 점검하고 나아가서 각 부처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하는 등 물가관리의 책임성 제고도 챙기고 있다.

한편 지난 1월과 3월에는 이성과 같은 정부의 총공급대책과 연계하여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0.25퍼센트 포인트씩 두 차례의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총수요 억제도 도모하였다.

4. 향후 물가 정책의 운용 방향

최근의 물가상승에 있어서는 총수요 측보다 총공급 측 요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정책당국도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공급측면의 물가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유효한 제반 대책을 거의 총망라하여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현재까지 종래에 자주 동원되었던 품목별 직, 간접 가격통제방식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공급 측 요인에 의하여 주도되는 물가급등에는 시장의 질서교란방지와 수급불안심리의 안정을 위해 행정지도와 규제를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대증적 대응의 효과는 한정적이며 그것은 결국 시장왜곡과 억압을 초래하여 상당한 역기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무엇보다도 제도 개편과 구조 혁신실행에 역점을 두어 국민경제 공급측면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물가상승과 물가불안심리를 안정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당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제도개편 및 구조개혁사항을 몇 가지 개괄적으로 언

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품 중 서민생활 관련 품목 및 국제 곡물 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승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가격 안정과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는 단편적인 관세인하에 그치지 말고 제시되고 있는 현행 관세율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 지원과 시장의 수급불안완화를 위해 국가원자재 조달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 억제와 경쟁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새 경제환경에 적응하는 제도적 개선도 본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원가인상 요인의 자체적 흡수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경영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생활용품 및 상품의 유통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 역시 조기에 확정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제도적 혁신에 의한 공급측면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가 꼭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가피한 해외 상승 요인(원자재, 곡물, 석유 등의 국제 가격 상승)에 의하여 주도되는 최근과 같은 물가급등에 있어서는 기업이윤의 축소와 원가의 절감(임금 동결내지 하향조정,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그 해외요인이 대내적으로 공평하게 최대한 흡수되고 나아가서 고통분담의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먼저 당면 물가급등에 있어서의 해외요인의 역할과 물가 안정화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주체들(기업, 가계, 임금노동자 등)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한편 비싼 원유 등 수입원자재의 소비를 절약할 것을 호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계속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예산절감, 감세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응 외에 수요 측면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거시정책의 적정정책조합(policy mix)을 모색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총수요측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 거시정책수단(통화, 재정, 환율정책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금리조정에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정책금리 인상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효과를 쉽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정책금리의 인상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전달경로를 통하여 그 정책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정책금리(초 단기 금리)인상→시장금리(중 장기 금리)상승→총수요감소→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 경로는 정책금리(초 단기 금리)인상→유동성총량감소→총수요감소→물가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는 그간 당국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반응하는 행태를 빈번히 보여왔다. 그리고 정책금리의 조정이 유

동성총량에 미치는 효과도 불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금리정책수단은 개방구조의 특성과 과도한 가계부채의 존재에 의해 그 유용성이 또한 제약 받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에 있어서는 최근 외국단기자본의 유입확대가 계속되어 부담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정책금리의 인상은 원화절상기대와 금리상승기대를 부추기어 외국자본유입을 다시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원화절상이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공급의 증가 또는 본원통화공급의 증가를 초래 할 수 있다. 특히 통화안정증권의 추가적인 공급물량이 클 경우, 이는 다시 시장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새로운 외국자본유입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에서의 금리나 환율을 왜곡의 악순환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간 한국경제에서는 가계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왔고 상당히 과다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2010년 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이 153%에 달함)도 금리정책의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히고 있다. 지금과 같이 개인부문의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 있는 경우 정책금리의 성급한 인상은 가중된 가계부담 증가와 상당한 금융부실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통화당국은 정책금리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정책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금리와 총 유동성 변수를 같이 중시하는 2원 지주(two-pillar)전략을 원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정책당국은 물가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안정을 위해 유동성총량 관리를 이전보다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감축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게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공시효과와 유동성축소효과를 발휘하는 필요지급준비율의 인상도 필요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통화안정증권 발행확대나 필요지급준비율인상과 같은 유동성축소 조치는 상당한 미시적 비용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이러한 부담과 부작용을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이루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우리경제운용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유동성축소방안을 부단히 강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외환당국은 앞으로도 시장환율이 실물경제기초(fundamental)과 크게 괴리되거나 과도하게 변동될 때는 이전과 같이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화절상이 지나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전보다 정책적 개입을 축소시켜 시장에 의한 환율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총수요관리차원에서 물가상승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재정지출시기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끝으로 정부당국은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 측 대책이든 수요 측 대책이든 모두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 한다. 다른 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물가정책에 있어서는 정책 일관성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 물가문제는 심리적 요소가 크므로 정책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결코 시장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

다.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정책의 효과는 크게 줄어 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나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이익집단의 압력이나 정치권의 포퓰리즘(populism)은 갈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러한 비 경제적 압력이나 주장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시키지 못하도록 특별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